

#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과제

## - 공해재판, 주민운동으로 부터의 보고 -

무라마쓰 아키오(村松昭夫) / 함인선\*\* 역

### 목 차

- |                         |                             |
|-------------------------|-----------------------------|
| I. 일본의 공해·환경오염과 운동의 도달점 | III. 21세기를 향한 환경법, 환경정책의 과제 |
| II. 공해환경을 둘러싼 행정의 움직임   | IV. 전망                      |

## I. 일본의 공해·환경오염과 운동의 도달점

### 1. 공해·환경파괴의 現狀

-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요즈음 이산화질소오염과 함께, 디젤배기가스 등의 미세입자의 오염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폐암이나 호흡기질환의 원인물질로서 뿐만아니라, 환경호르몬의 역할도). 호흡기질환의 공해환자의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 동시에,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의 다이옥신오염 등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의 오염도 심각화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문제로는 불법투기 등에 의

\*일본 전국 공해 변호인단 연합회의 사무국장, 변호사

\*\*고려대 법대 강사

한 오염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댐, 간척, 매립, 공항, 고속도로건설 등의 대규모공공사업에 의한 자연 환경이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파괴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 더욱이, 도쿄의 요코다기지, 오키나와의 가데나기지등의 미군기지주변의 폭음공해도 심각화되고 있고, 전국 4개소에서 군사기지의 폭음공해소송이 數千人규모로 제기되고 있다.
- 온난화방지대책도 뒤떨어지고 있다. 정부나 산업계는 국내정책으로 6%의 삭감으로 행한다라는 방향이 아니라, 배출권거래나 도상국과의 공동실시라는 「도피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 2. 공해환경운동의 도달점

### · 각종 공해재판의 전진

전국 7개소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대기오염재판에서는 이미 5개소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승리해결을 보고, 나아가 자동차배기가스의 공해책임의 관계에서도 西淀川(니시요도가와), 川崎(가와사키)에서 자동차배기가스의 건강영향을 인정하는 승리판결을 얻고서 최종해결을 보고 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중지소송에서는 근래 연이어 중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군기지의 폭음공해재판에서도 横田(요코다), 嘉手納(가데나), 厚木(아즈기) 등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얻고, 그 후에도 수천인 규모의 새로운 재판이 제기되고 있다.

### · 주민운동의 전진

댐, 간척, 공항, 원자력발전, 매립 등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은 전국각지

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펄의 매립중지나 규모축소를 얻어내는 등의 성과도 올리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에 의한 폐기물처리장건설 등을 중지시키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 주민에 의한 환경재생, 지역·마을건설운동  
(재)공해지역재생센터(靑空재단)의 설립  
전국 각지에서 자주적인 지역재생운동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 II. 공해환경을 둘러싼 행정의 움직임

- 환경어세스먼트법의 시행  
스크린닝이나 스코핑절차의 도입이나 조기단계에서의 주민참가 등 진면과 공정한 제3자의 심의기관의 부존재, 대체안의 검토의 의무부과의 불충분성
- 행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재검토의 움직임  
재정적자를 주요한 원인으로서, 「時的 어세스먼트」에 의한 일정한 공공사업의 재검토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불충분하지만, 도로정책의 재검토의 움직임이나 대도시내에 교통수요 매니지먼트를 도입하는 움직임 등도 있다(도쿄 등).
- 그러나, 여전히, 경기대책을 우선시킨 대규모공공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책의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의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발우선의 정책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도 변하고 있지 않다.

### Ⅲ. 21세기를 향한 환경법, 환경정책의 과제

#### 1. 공해·환경파괴의 원흉인 대규모공공사업을 어떻게 저지해 갈 것인가

· 하나는, 환경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능시켜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민참가의 실질화, 정보의 공개, 대체안의 검토 등 기본계획단계에도 어세스먼트제도를 도입할 것.

· 두번째는, 공공사업의 결정시스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계획단계부터 사업집행단계까지 민주성, 합리성, 공정성, 환경우선의 원칙을 확립할 것(공공사업책정절차의 법제화도 필요)

· 세번째는, 공공사업의 중지재판에서 다룰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는, 원고적격, 처분성의 벽 등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 2.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시스템의 전환

이 문제는, 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자책임의 원칙을 확립할 것이 기본이다.

### 3. 자동차의존사회의 전환

대기오염이라는 시점으로부터도, 온난화, 에너지문제라는 시점으로부터도, 나아가서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시점으로부터도, 자동차의존사회의 전환은 급무이다.

도로정책을 지탱하고 있는 도로특정재원제도의 재검토와 종합교통체계의 확립이 불가결이다.

### 4. 환경재생과 지역·마을건설을 진행시킬 것

21세기는 공해지역의 재생이나 환경을 재생, 나아가서 주민이 주체로 되는 마을건설이 어떻게 진행시켜갈 것인가가 문제된다.

### 5. 온난화대책 등 지구환경보전

- \* 어느 것이든, 이러한 과제를 진행시켜가는데있어서는 주민참가와 재정문제도 포함한 분권화, 행정과 주민과의 파트너쉽의 확립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 IV. 전 망

- 행정과 산업계의 움직임은 보면 비관적으로 되지만,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대응과 운동이 전진되어, 환경보전의 주민의식도 높아지고 있고, 환경을 지키고 재생해가는 움직임은 재판투쟁에서의 승리도 포함해서 커다란 흐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